

정책제안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ICT 관련 제도와 정책의 혁신 과제

2014. 10.

목 차

제안의 배경과 방향	1
I. 한국경제의 진단과 과제	2
1. 한국경제의 현황	2
2. 한국경제의 과제: “한국형 창조경제”	3
II. ICT생태계의 변화와 영향	4
1. ICT생태계의 변화	4
2. 한국경제에의 영향	6
III. 제도와 정책의 혁신 방향과 과제	8
1. 기본방향	8
2. 부문별 정책과제	8
(1) 산업정책: ICT융합 초점	8
(2) 통신·유료방송정책	11
(3) 투자 활성화	13
(4) 경쟁정책과 부문별 규제	14
(5) ICT법체계 정비	15
IV. 실행로드맵: 기간별 구분과 담당부처	16
1. 단기 과제	16
2. 중장기 과제	17

제안의 배경과 방향

- 세계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의 파고를 넘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창의성, 상상력이 경제성장의 핵심적 요인이 되는 창조경제가 대두되고 있음
 - 정보통신기술(ICT) 산업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급속한 생태계 변화를 드러내고 있음
- 한국경제가 저투자·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고 내수 침체와 서비스의 취약성, 성장의 고용창출력 약화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ICT기반의 창조경제 구현이 필수적인 정책과제임
- 본 제안은 시장경제연구원(MERI)이 주관한 'ICT 기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경쟁정책과 제도개선 연구'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것임
 - 동 연구는 최근의 ICT생태계 변화를 진단하고 국내 ICT산업과 융합부문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혁신 과제의 모색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또한 부문별 연구에 그치지 않고 산업, 경쟁, 규제 등 제반 제도와 정책혁신의 종합적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경제학, 경영학, 법학 등 학제적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두었음
- 본 제안의 방향은 ICT기반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한국경제와 ICT산업이 당면한 문제를 본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시장-정부 기능의 재정립과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지향하는 제도 및 정책혁신에 초점이 맞추어짐
 - 산업 전반의 ICT활용, ICT·타산업 융합을 확산하는 지원, 규제개혁 등 정책수단 강구, 일반경쟁정책과 부문특화규제의 관계 정립, ICT 법체계의 정비 등의 경제정책 과제를 도출함
 - 특히 ICT산업에 관하여 ICT네트워크 투자 활성화를 기반으로 통신·유료방송 시장의 요금, 서비스 등 경쟁촉진과 규제 합리화를 중요한 정책혁신의 과제로 제안함

1. 한국경제의 현황

- 세계경제의 회복이 가시화되면서 한국경제도 가계부채의 증가와 원화의 대외가치 변동 등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중장기 성장의 동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 2013년 상반기 2%대에서 하반기 3%대의 성장을 거쳐 2014년에는 4%수준의 성장을 추구하고 있음
 - 정부에서도 2014년 하반기 들어 재정확대, 규제개혁과 함께 금리인하 등 경기부양을 위한 시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으나 국민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성장구조의 개선임
- 그런데 한국경제는 저투자·저성장 기조를 극복하지 못한 가운데 다양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 여전히 내수의 취약성과 서비스부문의 미흡한 성장은 경제성장의 고용창출력을 낮은 수준에 머물게 하고 있음
 - 2013년 기업 설비투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임
 - 2013년 외부감사대상 기업 설비투자는 전년대비 5.5%감소(기획재정부)
 - * (대기업)△3.9%, (중소기업)△14.1% / (제조업)△6.5%, (서비스업)△16.4%
 - 2010-2012년 간에 한국경제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0.9%의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같은 기간 잠재성장률이 3.3%로 하락했고 2020년에는 2%대 초반으로 하락한다는 전망도 있음(IMF, 2014)

- ICT산업은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주도 부문이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성장, 투자, 수출 등에서 정체되고 있음
 - ICT산업 투자규모의 매출액 비중은 2000년에 10%를 기록한 이후 2011년에 5%수준으로 회복하였으나 2000년의 절반 수준에 정체되어 있음

2. 한국경제의 과제: “한국형 창조경제”

- 한국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국민소득 3만 달러 대 선진권에 진입하려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첨단 기술·지식을 바탕으로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경제의 활성화가 핵심과제임
 - 여기서 창의적 아이디어에 접목하는 첨단 기술·지식은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기술(BT), 나노기술(NT), 문화·콘텐츠 등임
 - 특히 한국경제의 강점에 비추어 ICT기반의 창의와 융합이 ‘한국형 창조경제’의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외국처럼 일부 문화산업, 과학기반산업에 그치지 않고 한국경제 전반을 포함하여 매우 포괄적이되 ICT에 강조점이 두어지고 개방과 규제완화, 경쟁촉진 등 시장기능 활성화가 추진동력이 될 것임
-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는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음
 - 아이디어와 창의성의 자극을 위해서는 창조인재의 양성, 지적 재산권 제도의 합리적 운영이 중요함
 - 아이디어·창의성의 혁신·융합 연계를 위하여 기업의 혁신·융합 활동을 지원하고 창조금융을 활성화하며 창조경제 지향의 규제개혁을 가속화하는 한편 창조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

- 혁신·융합 플랫폼·생태계 조성 지원을 위해서는 창조경제 클러스터 조성 및 글로벌 창조경제 네트워크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함
- 한편 ICT산업은 ‘한국형 창조경제’를 구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으로 중요하므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야 함
- 선도적 네트워크 기반과 기기·설비 제조업 경쟁력을 기초로 모바일 인터넷 경제에 부응하여 ICT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함

II ICT생태계의 변화와 영향

1. ICT생태계의 변화

- 세계 ICT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급속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음
- ICT산업에 수평화, 온라인화, 플랫폼화, 스마트화 등의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ICT생태계가 진화하고 있음
- ICT생태계는 모바일제품이 다양화되고 사물인터넷(IoT)이 급속히 확산되어 ICT가 일상생활과 산업에 보편화되는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고 있음
- 모바일혁명의 진전으로 콘텐츠(C), 플랫폼(P), 네트워크(N), 단말기(D)가 융합된 스마트 플랫폼이 경쟁의 주체로 부상하면서 급변하고 있음

□ ICT 패러다임 변화와 국내 ICT 산업정책의 시대별 흐름은 1990년부터 2002년까지의 IT1.0시대, 2003년부터 2010년까지의 IT2.0시대, 2011년부터 시작된 IT3.0시대로 구분할 수 있음

- IT1.0시대는 IT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개별시장의 활성화에 주력한 반면, 필수설비 의무제공제도가 도입된 IT2.0시대에는 IT자원의 외부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IT활용 기업 지원 및 소비자 참여형 혁신에 중점을 둠
- IT3.0시대는 IT산업 가치사슬의 재편과 최적화를 추진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간 협상형 혁신이 강조됨
- 최근에는 IT3.0시대에서 IT3.5 시대로 전환되고 있음
 - 소셜 네트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등 사람 중심 인프라는 일반화되고 IoT 등의 부상으로 스마트기기 개발 등 사물 중심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혁신과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할 전망이다

□ 통신시장에서는 경쟁 양상이 변모하면서 소비자 수요나 기업의 행동도 변화하고 있음

- 시장의 경쟁은 네트워크 보유 통신사 간의 전통적 경쟁에서 통신사 및 플랫폼·애플리케이션 기업 간의 경쟁으로 확대됨
- 통신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개별서비스에서 융합·결합서비스로 변화하고 전통적 음성통신서비스에서 앱 기반 데이터통신서비스로 전환함
 - 고도화된 무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개인별 특화·패키지화된 다양한 Io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 경쟁의 승자가 될 것임
- 따라서 네트워크사업자(NO), 플랫폼사업자(PO), 콘텐츠·애플리케이션 제공사업자(CP)간의 협력과 경쟁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임

- 방송산업에서는 부가가치 창출능력이 배급사에서 콘텐츠 기획·제작사로 이전하고 있음
 - 소비자수요도 선형적 시청에서 주문형 비디오(VOD) 등 비선형적 시청으로 이동하고 지상파,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모두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 비즈니스 모델 수정이 불가피한 가운데 치열하게 경쟁 중임

2. 한국경제에의 영향

- 한국은 초고속인터넷 인프라망의 구축과 인터넷의 확산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정보화에 있어서는 세계의 선두대열에 섰음
 - 또한 반도체, 휴대폰을 포함한 정보통신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산업도 급속하게 성장하였음
 - 방송통신 산업의 경우에도 시장규모가 2013년 3.9%, 2014년 4.5% (전망치) 성장하여 72.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ICT생태계 변화를 반영하여 주로 무선통신(LTE확산 등)과 콘텐츠 등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음
 - 방송은 지상파, CATV가 정체되는 가운데 위성방송, PP 등 성장으로 시장규모가 유지되고 있음
- 그러나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을 주력 제조업이나 서비스산업에 접목하여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고 신산업을 창출하는 창조경제의 확산에는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에 비하여 뒤처져 있는 것으로 평가됨
 - ICT산업의 기업 부가가치 비중은 OECD 최고이나 제조업, 장치산업 위주 구성으로 고용비중은 OECD회원국 27개 국 중 12위에 불과함

- ICT부문 내에서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이, 하드웨어와 단말기에 비해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취약한 실정임
 - ICT부문의 R&D비중이 OECD회원국 중 제조업은 2위이나 서비스업은 중간 정도의 수준임

- 특히 최근 ICT생태계 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인터넷의 확산과 모바일 혁명(스마트빅뱅)에 이어 모바일 기기·서비스 성장과 사물인터넷 확산을 뜻하는 제2 스마트빅뱅이 산업과 기술 간의 경계를 허물고 창의와 융합으로 신상품을 쏟아낼 것으로 전망됨
 - 문제는 한국경제가 이러한 추세에 다소 낙후되고 있다는 것이며 IoT 확산에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임
 - 설비나 그 구성요소 간의 인터넷 연결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 내장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함

- 최근 ICT생태계 변화에의 미흡한 대응은 산업 간 칸막이와 정부의 시장개입을 전제로 하는 정책과 제도의 한계가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 ICT네트워크 산업이 2000년대 중반 이후 투자·성장정체를 나타냄
 - 2000년 전후의 대규모투자 등 설비기반 경쟁과 과도한 규제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주된 원인임
 - ICT시장이 성숙하고 주요 ICT기업들이 사업안정화를 달성하여 공정 경쟁 여건이 정착되었지만 개별 부문특화규제가 지속되어 경쟁을 제약함
 - 이에 따라 ICT관련 법률들이 비체계적 난립과 경직성을 나타냄

1. 기본방향

- 창의와 융합, 개방과 경쟁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창조경제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제도와 정책의 혁신이 시급함
 - 특히 산업간 칸막이를 전제로 하는 지원·규제를 최근의 기술변화를 반영하여 개혁하여야 함
- ‘한국형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산업발전 전략을 체계화하고 ICT산업 발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기업의 창업·성장파 창의·융합을 지원함
 - 각 창조산업 라이프사이클의 단계별로 지식·문화, 금융·시장, 클러스터, 성장지원 등의 시책을 강구함
 - ICT경제 고도화의 기초로서 네트워크 기업의 ICT인프라 투자를 촉진함
 - 취약한 소프트웨어, 콘텐츠 부문을 보강하고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함

2. 부분별 정책과제

(1) 산업정책: ICT융합 초점

- ICT활용 및 ICT융합 기업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제도의 개선
 - 정책금융을 ICT융합 부문 제조·서비스 기업에 집중하고 창업·성장초기 기업에 대한 직접투자 중심의 금융지원을 확대함
 - 성장단계 별로 융자·보증·투자·자문 결합의 맞춤형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함

- 성장사다리펀드를 확충하여 해외 벤처캐피탈 등 민간자본 참여를 유도하고, ICT융합 및 혁신형 기업 전용의 Buyout펀드를 조성함
 - 지식재산 금융 생태계를 조기에 구축하여 공공·민간 금융기관의 지식재산 담보금융 취급을 확산해 나감
 - 중소기업 세액공제 지원 범위를 (연구·인력개발·고용창출투자·설비투자 지원에서) 무형자산, 기술융복합 M&A 투자 등으로 확대하고 중견기업 지원을 도입함
 - 엔젤, 클라우드, 벤처캐피탈 투자의 소득공제, 비과세 등 세제지원을 확대함
 -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사업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Patent Box 제도를 도입함
- 산업 간 융합과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보강
- ICT 등 신기술·융합 제품의 표준, 인증, 인허가 등 규제의 일관·신속 처리시스템을 구축함
 - 산업부·미래부 등 관계부처 간 협력으로 네거티브 규제체제로 조속히 이행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
 - ICT활용과 지식재산 확보, 융합 활성화(ICT 활용·융합) 등을 위한 M&A의 촉진제도를 강화함
 - ICT활용·융합 M&A 전용 펀드를 조성하여 해외 M&A전문 사모펀드 참여를 촉진하고 관련 M&A 자문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함
 - 기술사업화지원 대상에 지식·문화 콘텐츠, ICT융합 서비스 등을 추가함
 - 개발성과 사업화, 융복합 기술개발, 글로벌 시장형 창업 R&D사업 등 정부지원 사업에 이들 부문을 지원대상으로 포함함
 - 특히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강한 네트워크, 단말기 기반의 융합사업화를 적극 지원함

□ 창조경제 시대에 적합한 산업지원 정책체계의 정립

- 신기술·융합 부문에 대한 시장진입과 경쟁력 강화 시스템을 보강함
 -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등 융합관련 규정의 통합 등 융합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일원화함
- R&D, 인력양성, 무형자산 축적·활용 등 재정지원 사업을 창조경쟁력 및 사회문제 해결을 초점으로 하여 운영함

□ 수요기업의 ICT활용, ICT-제조·서비스 융합 촉진의 규제개혁 완료

- 개별 산업과 융합 부문의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ICT 등 신기술산업의 동태적 특성에 적합한 경쟁규제제도를 확립함

□ ICT패러다임 경쟁 선도를 위한 IT3.5 정보통신정책의 시행

- ICT 투자유인 강화와 ICT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함
 - 경제·사회 전반의 생산성 증대와 생태계 참여자간의 전략적 정합성(alignment) 확보로 정책의 방향성과 일관성을 도모함
 - ICT-비ICT 융합과 IoT기반 네트워크 구축 및 플랫폼·콘텐츠 개발을 적극 지원함
- 방송통신 시장의 경쟁촉진을 통하여 유료 방송통신 기업의 능동적인 시장 창출과 상호 수요 확대를 유도함
 - 와해형 기술개발과 파괴적 혁신을 중점 지원함
- 사실상 표준(de facto standardization) 지향의 IoT대응, M2M 등 플랫폼 개발 지원을 통하여 방송통신 융합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견인함
 - 나아가 IoT 기반 네트워크의 교육, 교통, 보건 등 다양한 응용분야별 인터페이스의 표준화도 지원함

(2) 통신·유료방송 정책

가. 통신 부문

□ 통신시장의 서비스 기반 경쟁 확대

- 소매요금의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요금제 설계 및 요금 결정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여 가격(요금)경쟁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함
- SIM카드 이동성의 강화와 가입비의 폐지 등으로 사업자 간 전환장벽을 완화하고, 이동전화 도매시장 활성화로 MVNO(재판매서비스사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함
- 보편적 서비스 제도를 기술 중립적으로 개선함
 - 지역에 따라 PSTN 음성서비스, 인터넷전화, 이동전화 서비스 중 제공비용이 가장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사업자가 선택하여 제공하도록 하여 보편적 서비스 범위를 기술중립적으로 규정함
 - 특히 수요가 격감한 공중전화는 필요 최소한으로 공급하되 공공성에 상응한 재정지원으로 운영함

□ 수평적 통신규제 체계의 범제화

- 수평적 규제체계에 따라 역무·사업자 분류를 개편함
 - ‘전기통신’ 개념을 확대하여 ‘정보통신’ 개념을 신설함: ‘유선·무선·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음향·영상을 송신·수신하거나, 수집·저장하거나, 송수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통신서비스를 수평적으로 분류하여 네트워크서비스, 전송서비스, 정보서비스 등으로 구분함

□ 통신 네트워크 고도화 및 활용도 제고

- 원활한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하여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네트워크 구축 및 고도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적절히 설정하여 모바일 광대역네트워크 및 유무선 융합 네트워크의 확충과 무선 전송기술의 표준화를 도모함
 - 수평적 규제 전환으로 네트워크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이용요금이 적절히 설정되도록 유도함
- 무선주파수를 적극 발굴하고 (방송부문 등)사용효율성이 낮은 주파수는 회수하여, 통신부문에 재배치함
 - 주파수의 용도는 소비자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정함

나. 유료방송 부문

□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편성 채널 제도의 합리화

- 아날로그 방송 시대에 형성된 현행 제도를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적합하게 완화함
 -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거나 시청자 복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부분은 폐지함

□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의 실효성 개선

-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사간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관련 논쟁을 조정하여 시청권 보호와 사업자 간 이익 균형을 도모함
-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공적 자원 보전을 조건으로 의무재송신 채널의 범위를 적정하게 설정함
 - 규제기관은 투명한 자료공개 요청으로 상호간 대가 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함

□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부합하는 수평적 방송규제 체계 도입

- 기존의 칸막이식 규제 체계를 벗어나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부합하는 수평적 규제 체계를 도입함
 - 공공 미디어 사업자와 민간 경쟁 사업자로 이원화하여 각각의 범주에 대한 규제·지원 등의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함
- 특히 공공 미디어 사업자에 대한 규제·지원 체계를 정립함
 - 공공 미디어 사업자의 역할과 책무, 재정지원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공공 미디어 사업자의 유료방송 진출 관련 규정도 정비함

(3) 투자 활성화

□ ICT산업 발전협의체의 구성·운영

-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 협의체를 구성함
- 이 협의체를 통하여 ICT산업의 당면 문제를 공유하고 부문 간 상생 방안을 모색하며 산업의 수익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을 전개함
 - 사업자들이 파괴적인 경쟁을 지양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신규 서비스 개발에 노력하도록 유도함

□ ICT네트워크 투자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및 규제 개선

- 투자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주파수 경매방식을 개선하여 사업자부담을 완화함
- 설비제공 규정 등 불필요한 유무선의 ICT네트워크 기업 관련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함

□ 유무선 요금제도의 가격기능 제고

- 요금경쟁의 시장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사업자 자율의 무제한 정액제 지양 및 종량제 요금 이행 등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조성함

(4) 경쟁정책과 부문별 규제

□ ICT 시장의 사전규제 부문의 범위 규정

- 유럽의 SMP(significant market power)에 의한 사전규제대상 판단방법을 차용하여 사전규제 필요 영역(예: 통신시장의 상호 접속, 주파수 관리, 개인정보보호, 방송시장의 방송다양성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 사전규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영역은 일반경쟁 정책으로 규율함
- 단말기 보조금의 경우 ‘단말기유통법’ 상의 보조금 규제에 의하여 보조금 관행이 정상화되는 대로 경쟁사업자 배제, 시장봉쇄의 금지 등 일반경쟁규제로 규율하여 부문별 규제대상에서 제외함

□ 이동전화 및 시내전화 소매요금의 가격경쟁 촉진

- 소매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함과 동시에 신고제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요금공시 등 관련제도를 보완함
-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부문특화규제) 사후 규제를 강화하되 일몰제로 규정함
- 장기적으로는 시장경쟁의 성과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신고제를 포함한 모든 소매요금의 사전규제를 철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함

□ ICT의 일반경쟁 정책과 부문특화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

- 일반경쟁 정책과 부문특화 규제 간의 규제관할권 충돌이나 중복규제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해소함

- 특히 ICT 시장의 경쟁과 관련하여 일반경쟁 정책이 부문특화 규제에 의하여 무력화되지 않도록 법률을 개정함
 - 부문특화 규제 법률(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등)이 공정거래법 등 일반경쟁정책의 규율을 대체하거나 우선할 수 없음을 명시함(미국 통신법의 Savings Clause 규정 차용)

□ ICT 소매영역의 부문특화 규제 배제를 위한 법률 개정

- ICT 경쟁정책에 관해, 궁극적으로 부문특화 규제는 도매영역으로 국한하여 소매영역(요금, 판매, 유통 등)은 일반경쟁 정책의 대상으로 전환함
 - 도매영역도 사전규제 필요여부를 평가하고, 사전규제 폐지의 경우에는 일반경쟁 정책 규율로 전환함

(5) ICT법체계 정비

□ (가칭)「정보미디어기본법」 제정

- 현재 진행 중인 통합방송법 제정 논의는 (가칭)「정보미디어 기본법」 제정 논의로 전환함
 - 방송법의 IPTV법 흡수 통합보다는 큰 틀 안에서 상호 접근하는 방식으로 개정함이 바람직함

□ ICT 전 분야를 포괄하는 기본원칙을 제시하되 영역별 고유법률을 흡수하지는 않음으로써 영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둠

- 인터넷정보 서비스는 ‘사전규제 철폐’, 통신 서비스는 ‘규제 완화’, 융합 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유예’의 원칙을 규정함
- 영역별 법률도 기본법이 제시하는 체계 및 원칙에 따라 재정비함

□ ICT 관련 정부조직의 개편

- 방송·통신·정보 관련 정책을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독립제 부처로 (가칭) ‘정보미디어부’ 를 창설함
 - 미래창조 행정 기능은 대통령 직속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관장하고 과학기술부를 분리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미디어부 소속의 준(準)독립기관으로 설치함

IV 실행로드맵: 기간별 구분과 담당부처

1. 단기 과제

□ 금년 내에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 상반기까지는 시행완료함을 목표로 하여 추진함

부문	정책과제	관련부처
산업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T활용 및 ICT융합 기업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제도의 개선 • 산업 간 융합과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보강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유료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시장의 서비스 기반 경쟁 확대 •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편성 채널제도의 합리화 •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의 실효성 개선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투자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T산업 발전협의체의 구성·운영 	미래창조과학부
경쟁·부문별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T 시장의 사전규제 부문의 범위 규정 • 이동전화 및 시내전화 소매요금의 인가제 폐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ICT 법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방송법 제정 논의의 (가칭) 「정보미디어 기본법」 제정 논의 전환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2. 증장기 과제

- 금년 중 논의에 착수하여 2015년 내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함
 - 심층 정책연구, 부처 간 업무협약, 국회와의 조율이 필요한 과제임
- 현 정부 임기 내에 완료 또는 착수를 목표로 추진함

부문	정책과제	관련부처
산업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조경제 시대에 적합한 산업지원 정책체계의 정립 • 수요기업의 ICT활용, ICT-제조·서비스 융합 촉진의 규제개혁 완료 • ICT패러다임 경쟁 선도를 위한 IT3.5 정보통신정책의 시행 	기획재정부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유료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평적 통신규제 체계의 법제화 • 통신 네트워크 고도화 및 활용도 제고 •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부합하는 수평적 방송규제 체계 도입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투자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T네트워크 투자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및 규제 개선 • 유무선 요금제도의 개편 	기획재정부 국무총리실 미래창조과학부
경쟁·부문별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T의 일반경쟁 정책과 부문특화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 • ICT 소매영역의 부문특화 규제 배제를 위한 법률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ICT 법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칭)「정보미디어기본법」 제정 • ICT 관련 정부조직의 개편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안전행정부

□ 제목: ICT 기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경쟁정책과 제도개선 연구

□ 연구진 및 자문진:

연구진	
김인호 연구 책임 (이사장, 선임연구위원)	
최성호 (초빙연구위원, 경기대 교수)	· 창조경제와 산업발전전략
신민수 (초빙연구위원, 한양대 교수)	· ICT 생태계의 변화 및 ICT 산업의 전망
이상규 (초빙연구위원, 중앙대 교수)	· 통신 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도준호 (초빙연구위원, 숙명여대 교수)	· 유료방송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홍철규 (초빙연구위원, 중앙여대 교수)	· ICT 투자 현황과 활성화 방안
정인석 (초빙연구위원, 한국외대 교수)	· 부문특화규제와 일반 경쟁법 체계에 의한 규제의 조화
정찬모 (초빙연구위원, 인하대 교수)	· ICT 법체계의 근본적 개선의 모색

자문진	
형태근 자문위원장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운섭 (전 삼성전자 부사장)	
김준상 (전 방송통신위원회 국장)	
김현수 (국민대 경영학과 교수)	
신동희 (성균관대 일반대학원 교수)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임주환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장석권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